

# 전문가 100인이 보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경협

김정균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태일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조사 개요

**조사** 대경제연구원은 북한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경협」이란 제목의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 일 동안 진행된 이번 조사는 남북정상회담 발표가 있는 지 1 주일이 지난 후여서 흥분과 놀라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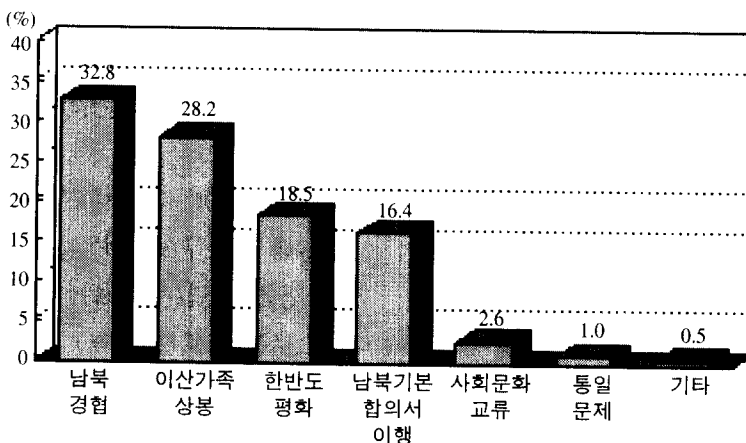
조사는 FAX 조사로 실시되었고, 조사 대상자는 총 100 명으로서 학계 31 명, 연구소

30 명, 언론계 6 명, 기업계 20 명, 공무원 등 기타 13 명으로 구성되었다.

## 남북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

전문가들이 꼽는 남북정상회담 최우선 의제 1위는 '남북 경협' (32.8%)이며, 2위는 '이산가족 상봉' (28.2%), 3위는 '한반도 평화' (18.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경제적으로는 남북 경협, 사회적인 통합의 실마리로서 이산가족 문제,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이 우선 의

〈그림 1〉 남북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



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3월 9일 베를린 선언에서 제시된 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 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 종식과 남북간 평화 공존, 이산가족 해결을 비롯한 인도적 사안 등이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음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16.4%), '사회 문화 교류'(2.6%), '통일 문제'(1.0%) 등이 뒤를 이었는데, 통일 문제에 대한 비율이 극히 적은 것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을 직접 거론하는 것이 회담의 성공적인 결과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 경협 추진 분야

### 초기 단계의 경협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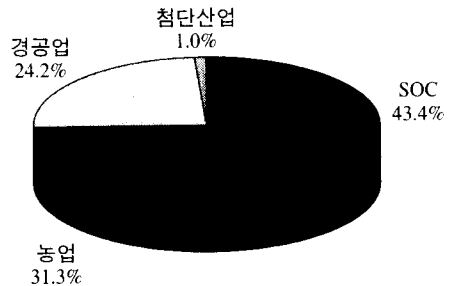
초기 단계의 경협에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SOC 투자(43.4%)와 농업 부문(31.3%)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베를린 선언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SOC 투자를 통해 향후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 해결을 위해 농업이 우선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공업(24.2%), 첨단 산업(1.0%) 등이 언급되었는데, 임가공 등 경공업 분야부터 경협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며 첨단 산업은 북한의 수준을 고려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지식 기반 경제, 디지털 경제 등 신경제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남한내 성장 한계 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이 초기 경협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전문가 집단별로는 기업인들이 SOC 투자(55.0%)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현 상황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전력, 도로, 철도 등 북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기업인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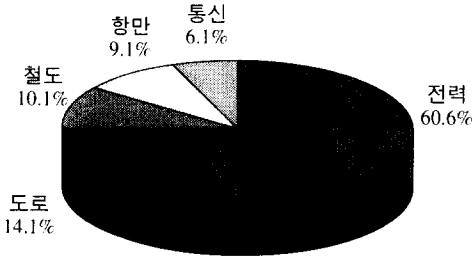
〈그림 2〉 경협 초기 단계에서의 추진 분야



### SOC 부문의 최우선 투자 대상

그러면 SOC 가운데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전력(60.4%)이라는 응답이었다. 다음으로는 도로(14.1%), 철도(10.1%), 항만(9.1%), 통신(6.1%)의 순이었는데, 전문가들은 감시가 가능한 철도보다는 상대적으

〈그림 3〉 SOC 부문의 최우선 투자 대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우선 한정된 재원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 개발을 한 이후, 이를 거점으로 하여 인근 지역으로 개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적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로 왕래가 자유로운 도로를 선호하고 있었다. 다른 전문가 그룹에 비해 기업인들의 경우 '전력' (84.2%)을 일차적인 투자 대상으로 꼽는 비율이 높았다.

### 투자 집중 지역

북한 전문가들이 투자 대상 지역으로 꼽는 도시는 남포공단(28.7%), 나진·선봉(21.0%), 신의주(13.4%), 해주(11.5%) 등의 순이었다. 서해공단의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었던 남포공단, 신의주, 해주 등이 전체의 53.6%나 되어, 서해공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5명 가운데 1명은 원산(7.6%), 평양(7.6%), 개성(3.8%) 등 북한 중심 도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 대북한 투자 방식 및 투자 지역

#### 북한 개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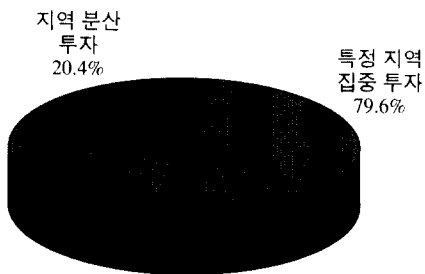
북한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집중 투자' (79.6%)가 '분산 투자' (20.4%)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체제 안정을 위해 북한 전역에 대한 분산 투자를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란

### 대북 투자 규모 및 자금 조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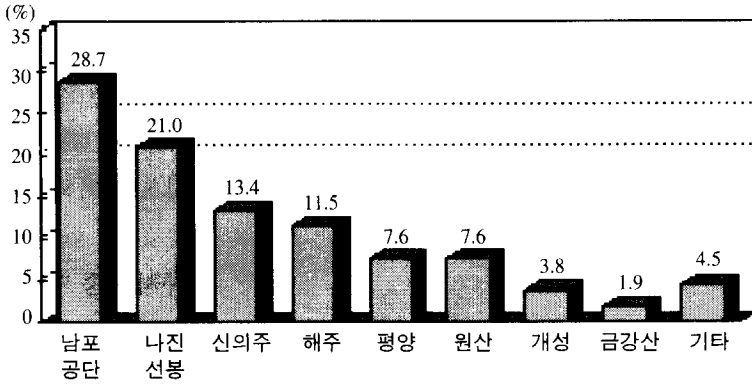
#### 대북 투자 규모

'국민의 정부 기간내 대북한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10억~20억 달러' (26.6%), '20억~30억 달러' (26.6%)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30억~40억 달러' (18.1%), '40억 달러 이상' (17.0%) 등 30억 달러 이상을

〈그림 4〉 효과적인 북한 개발 방식



〈그림 5〉 투자 유망 지역



예상하는 전문가도 25.1%나 되었다. 대북한 투자 자금 규모에 대한 전망치가 10억 달러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분산되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투자 소요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0억 달러 미만'이라는 예상은 11.7%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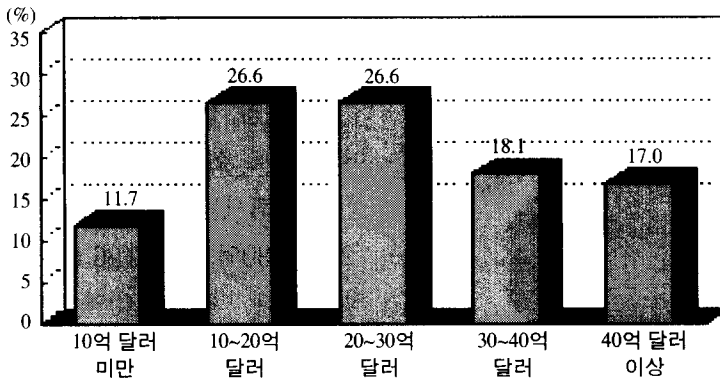
전문가 집단별로도 대북 투자 자금을 대한 전망치는 약간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는 '10억~20억 달러' (37.0%)로 전망

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연구원은 '20억~30억 달러' (34.5%)를 전망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반면 기업인들은 '40억 달러 이상' (30.0%)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많아 다른 집단에 비해 투자 자금 규모를 더 많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북 투자 자금 조달 방식

대북한 투자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식으로

〈그림 6〉 대북 투자 규모



〈표 1〉 투자 자원 조달 방식

구분	내용	%
국내	(1) 국채 발행	40.2
	(2) 각종 기금의 전용	38.1
	(3) 기존 예산 절감	9.3
	(4) 증세	7.2
	(5) 민간 기업 투자	3.1
	(6) 기타	2.1
	계	100.0
국제	(1) 국제 컨소시엄	50.0
	(2) 프로젝트 파이낸스	26.5
	(3) 공공 차관	17.3
	(4) 상업 차관	3.1
	(5) 기타	3.1
	계	100.0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것은 국내 부문에서는 ▶국채 발행(40.2%), ▶각종 기금의 전용(38.1%), ▶기존 예산 절감(9.3%), ▶증세(7.2%), ▶민간 기업의 투자(3.1%) 등이었다. 세금을 올리거나 민간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보다는 통일 국채 등을 발행하거나 각종 기금을 전용하는 등 보다 대규모적인 자원 조달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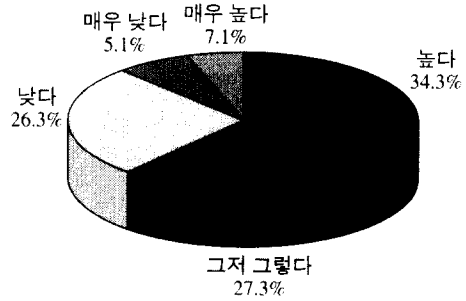
국제 부문의 경우는 ▶국제 컨소시엄(50.0%), ▶프로젝트 파이낸스(26.5%), ▶공공 차관(17.3%), ▶상업 차관(3.1%) 등을 선호하고 있었다.

### 투자 자금 조달 및 민간 투자 방식

#### 투자 자금의 해외 조달 가능성

정부는 소요 자금의 상당 부분을 국제 기구 등 해외로부터 조달할 수 있을 것이란 의

〈그림 7〉 투자 자금의 해외 조달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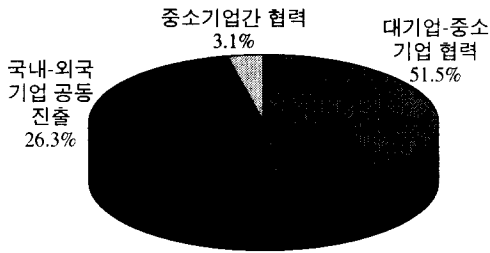
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회의보다는 공감쪽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자 자금의 해외 조달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7.1%)와 '높다'(34.3%)는 의견을 합치면 모두 41.4%가 정부 의견에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회의적인 견해는 '매우 낮다'(5.1%)와 '낮다'(26.3%)는 의견을 합쳐 31.4%였다. '그저 그렇다'는 판단 유보적인 의견도 27.3%나 되었다.

전문가 집단별로 공감하는 의견과 회의적인 의견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공무원은 61.4% 대 15.4%로 공감하는 의견이 훨씬 많은 반면, 연구원은 23.3% 대 46.7%로 오히려 회의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교수는 40.0% 대 26.7%, 기업인은 55.0% 대 25.0%였다.

#### 바람직한 민간 투자 방식

민간의 대북한 투자 방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방식'(51.5%)과 '국내 기업

〈그림 8〉 바람직한 민간 투자 방식



과 외국 기업간의 공동 진출' (45.4%)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진출'은 3.1%에 불과, 대체로 중소기업만의 진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대기업이 먼저 진출하여 기반을 닦아놓은 후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경협의 선결 과제

남북한 공동 선결 과제

정상회담 이후 경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는 북한 전문가의 42.5%가 응답한 '투자보장협정 등 법제도 정비'였다. 즉 이중과제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분쟁 조정 절차 합의 등 최소한의 투자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는 ▶통행 및 통신 자유 보장(19.5%), ▶육로 연결(12.5%), ▶직교역 체제 확립(11.5%), ▶대금 결제 방식 개선 등 청산 결제(7.5%),

▶공단 등 특구 개발(6.0%)의 순이었다.

전문가 그룹별로 의미있는 의견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업인의 경우 '직교역 체제 확립' (17.5%)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 남북한 공동 선결 과제

내용	%
(1) 투자보장협정 등 법제도 정비	42.5
(2) 통행 및 통신의 자유 보장	19.5
(3) 육로 연결	12.5
(4) 직교역 체제 확립	11.5
(5) 청산 결제(대금 결제 방식 개선)	7.5
(6) 공단(특구) 개발	6.0
(7) 기타	0.5
계	100.0

우리 정부의 선결 과제

정상회담 이후 경협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국내의 법적·제도적 장치 정비' (39.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기업에 대한 재정·금융상의 지원, 각종 세제상의 혜택, 물류비 보조 등 '기업에 대한 지원' (30.6%)과 '경협 관련 정보 공유체계 구축' (29.6%)이 꼽혔다.

전문가 그룹별로 보면, 교수는 '경협 관련 정보 공유체계 구축' (38.7%), 기업인은 '기업에 대한 지원' (42.5%), 공무원은 '국내의 법적·제도적 장치 정비' (45.8%)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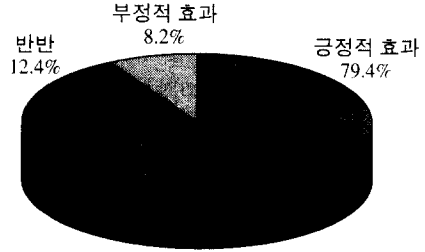
### 북한 정부의 선결 과제

경협을 위해 북측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것은 ▶북한 투자 관련법 정비(34.0%), ▶계약 등 국제 상 관행 준수(30.0%), ▶개방 지역의 확대(15.0%), ▶남한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12.0%), ▶경제 관련 정보 공개(9.0%) 등의 순이었다. 특히 '남한 기업 우대 조치'에 대한 지적은 중국의 대만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가 양안 교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염두에 둔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표 3〉 우리 정부 및 북한의 선결 과제

구분	내용	%
남측	(1) 국내 법적·제도적 장치 정비	39.8
	(2) 진출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30.6
	(3) 경협 관련 정보공유체계 구축	29.6
	계	100.0
북측	(1) 북한 투자 관련법 정비	34.0
	(2) 계약 등 국제 상 관행 준수	30.0
	(3) 개방 지역의 확대	15.0
	(4) 남한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12.0
	(5) 경제 관련 정보 공개	9.0
	계	100.0

〈그림 9〉 남북 경협의 효과



### 긍정·부정 효과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경제 성장의 시너지 효과 증대(43.8%), ▶대외 신인도 제고(23.6%),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12.4%), ▶국내 경기 부양(10.1%),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 증대(9.0%)의 순이었다. 전문가 그룹별로는 기업인은 '경제 성장의 시너지 효과 증대(61.1%)'와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16.7%)를, 연구원은 '대외 신인도 제고'(30.8%), 학계에서는 '국내 경기 부양'(17.9%)을 긍정적인 효과를 전망하는 비율

### 경협의 영향 및 향후 전망

####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북 경협이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 효과'(8.2%)보다는 '긍정적 효과'(79.4%)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4〉 경협의 효과

구분	내용	%
긍정적 효과	(1) 경제 성장의 시너지 효과 증대	43.8
	(2) 대외 신인도 제고	23.6
	(3)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	12.4
	(4) 국내 경기 부양	10.1
	(5)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 증대	9.0
	(6) 기타	1.1
	계	100.0
부정적 효과	(1) 재정 부담 증대(조세 저항)	70.0
	(2) 국내 투자 자원 부족	30.0
	계	100.0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북 경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투자 재원 확보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관계된 것들이었다. '조세 저항 및 재정 부담 증대' (70.0%)와 '국내 투자 재원 부족' (30.0%) 등이 전문가들이 꼽는 부정적 효과였다.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협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 모두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로는 ▶SOC 확충(35.4%), ▶투자 유치 확대(28.3%), ▶대외 신인도 제고(18.2%), ▶국부의 증대(8.1%), ▶선진 기술 및 경영 기법 습득(8.1%), ▶수출 증대(2.0%)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보다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여건도 함께 어워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및 테러 지원국 제외 조

치, 북일 수교 및 배상금 규모 등은 향후 남북 경협의 활성화에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이다.

남북 경협 전망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낙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93.1%였다. 반면 '나빠질 것'이란 전망은 하나도 없었고, '별 변화 없을 것'이란 의견도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체제 유지'와 '경제 극복'이라는 양자택일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이후 신뢰감이 형성됨에 따라 체제 위협의 불안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북한의 정책 기조가 '경제 극복' 쪽에 더 힘이 실리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협은 그 과정에서 사소한 불협화음은 있을 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이 보는 남북 경협의 전망이다. **97**

〈표 5〉 경협이 북한에 미치는 효과

내용	%
(1) SOC 확충	35.4
(2) 투자 유치 확대	28.3
(3) 대외 신인도 제고	18.2
(4) 국부의 증대	8.1
(5) 선진 기술 및 경영 기법 습득	8.1
(6) 수출 증대	2.0
계	100.0

〈그림 10〉 남북 경협 전망

